

“尹정부 국토사업, 전북 확대”

민주 김수홍 의원, 국토부 국감서 “서부내륙 2단계 조기착공 지연… 조기 추진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원전 확대에 의해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음”

윤석열 정부의 국토사업에서 전북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전북을 확대하고 패싱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외국 자본(백리)에 의해 가로막힌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를 두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연평균 22.4%의 엄청난 수익을 내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로 인해 이미 국토부가 약속했던 서부내륙 2단계 조



기착공이 지연되는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이용옥 도로국장을 향해서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조기추진을 촉구했고 이를 수용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들였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선에 대해서도 향후 급격히 늘어날 통행량과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익산-세종 구간이 6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세종까지 최대 8만대까지 통행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호남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이용차량이 몰리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저속도로로 전락해 이용자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고속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익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통행량 수요조사와 용역을 통해 향후 제3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의 핵심 사업”임을 강

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변전 설비의 개통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꿈쩍도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RE100산단(스마트그린산단) 등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임을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지금,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새만금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수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공약이나 예산, SOC사업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닌 새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민주 김성주 의원, 한자의날

유공자 표창 ‘국회의원상 수상’



한국원자단체연합회는 6일 제3회 ‘한자의날’ 기념식에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정 통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올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당시 5살(故)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동희 부모의 바람을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담아 입법화했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때 치료받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김경수 기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설명’ 전북도의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이병도(오른쪽) 의원이 6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도, 직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오늘까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시·군·의회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8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시한다.

최근 자치법규 입안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2,099건

(도 185건 시군 1,914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제·개정해 2020년(1,675건) 대비 25.3%가 늘어났다.

이에 전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교육을 마련하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생활 법률문화, 사례 중심의 행정소송 실무

등을 다룰 예정이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법제교육은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는 등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김경수 기자

尹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보훈처, ‘부’ 로 승격

여가부 폐지, 복지부 편입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재외동포청’ 신설
이민청 등은 개편안에 빠져

정부·여당, 국회 동의 구해
11월 법안 통과 목표삼아
‘국회 처리과정 험난할 듯’

윤석열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부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분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된다.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 적양성평등본부로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

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애초 거론되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져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현행 18부 4처 18청 69위원회는 18부 3처 19청 69위원회로 재편된다. 1개 처가 줄어들고 1개 청이 늘어나 전체 기관(46개) 수는 변동이 없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선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청소년·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달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높인 국가적 위상에 부합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정읍 야행

선선한 가을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밤풍경도 아름다운 정읍!

정읍시 JEONGEUP-SI

정읍사공원과돌하리일원